



농림부

한·미 FTA 타결, 닭고기 10년후 관세 철폐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협상 시작 423일 만에 최종 타결됐다.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네 번째다.

한국과 미국은 4월 2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FTA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는 상품, 무역규제, 투자, 서비스, 정부 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 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세계 최대 FTA가 될 전망이다.

이번 FTA 협상 중 농업분야의 키 포인트는 ▲쇠고기 수입관세(40%) 15년간 단계적 철폐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오렌지 계절관세 도입 등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도체와 이분도체, 부분육 모두 냉장이든 냉동이든 현행 40%인 관세를 매년 균분하여 15년 후에는 완전 철폐하고, 이 기간 동안 쇠고기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돼지고기는 10년 후 관세를 완전 폐지하고, 역시 이 기간동안 돈육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토록 하고 있다.

닭고기는 통닭과 냉동 가슴살·날개 등은 12년후 폐지기로 하고 있다. 계란은 계란, 전란액은 15년, 난황은 12년 후에 관세를 완전 폐지기로 합의됐다.

낙농품의 경우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치즈는 체다치즈의 경우 10년, 나머지는 15년후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하고 있다.

한편 사료용 곡물의 관세는 옥수수과 대두는 즉시 폐지되고, 사료용 근채류는 15년후에 완전 폐지된다.

〈축산분야 FTA 협상 결과〉

품목	협상결과
닭고기	○ 통닭, 냉동(가슴살, 날개) 12년 폐지 ○ 냉장육,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 닭고기 가공품 10년 폐지
계란	○ 계란, 전란액 15년폐지, 난황 12년 폐지 ○ 종란 10년 폐지, 난백 5년 폐지
쇠고기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총 6개 세번 15년 폐지, 15년차까지 SG발동 - SG 발동물량 : 27만 → 36만톤(매년 6천톤 증량) - 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 세율 100% → (6~10년) 75% → (11~15년) 60% ○ 육우와 식용 설육(족·꼬리 등), 쇠고기 가공품은 등은 15년 폐지
돼지고기	○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 목살 등) 돈육 10년 폐지, 10년차까지 SG 발동 - SG 발동물량 : 8천250 → 1만13천938톤(매년 복리 6% 증량) - 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 세율 100% → (6~10년) 75% → 50%(매년 5%씩 삭감) ○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냉동육, 식용 설육, 돼지고기 가공품 2014년 1월 1일에 폐지(7년 폐지와 유사) ○ 소시지는 5년 폐지
기타 축산물	○ 오리고기 냉장육 10년 폐지, 냉동육 12년 폐지 ○ 산양, 면양고기 10년 폐지, 칠면조 고기 7년 폐지 ○ 녹용, 녹각 15년 폐지

품목	협상결과
낙농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현행 관세 유지, TRQ물량 제공(5천톤, 매년 복리 3% 증량) ○ 혼합분유 10년 폐지, 조제분유 10년 폐지, TRQ물량 제공(700톤, 매년 복리 3% 증량) ○ 밀크와 크림 10~15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함량 60%이하 15년 폐지 - 기타 지방함량 60%초과 12년 폐지 ○ 냉동크림 지방함량 60%초과 10년 폐지 ○ 치즈는 체다 10년 폐지, 나머지 15년 폐지, TRQ물량 제공(7천톤, 매년 복리 3% 증량) ○ 버터 10년 폐지, TRQ물량 제공(200톤, 매년 복리 3% 증량) ○ 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 10년 폐지, TRQ물량 제공(3천톤, 매년 복리 3% 증량) - 사료용 즉시 폐지 ○ 유당 5년 폐지
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꿀은 현행 관세 유지, TRQ물량 제공(200톤, 복리 3%씩 증량) → 인조꿀,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 10년 폐지
사료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용 근채류 15년 폐지, TRQ물량 제공(20만톤, 증량없음) ○ 보조사료 12년 폐지, TRQ물량 제공(5천5백톤, 매년 복리 3% 증량) ○ 옥수수(사료용), 대두(채유 및 박용) 즉시 폐지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 도입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가 처음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종류가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구분되었지만, 이번에 전환기유기농산물이 삭제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간소화되었다.

둘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무항생제로 표시된 축산물이 일부 유통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농가 별로 사육기준이 각기 달라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통

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며, 미인증품에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축산물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재포장하는 자로 인증을 받을 경우 유통단계에서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바꾸거나 다른 품목과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인의 역할이 증대되어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시중에 많은 친환경자재가 유통되어 왔으나 실제로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농업인이 자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자재의 성분 등을 검토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재의 목록을 농촌진흥청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公示)하게 되며, 농업인은 공시된 자재에 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어 친환경유기농자재 선택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도입된 '무항생제축산물'과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3월 28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및 인증기관에 신청이 가능하며,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제'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정책' 94P 참조).

■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 마련

농림부는 과잉상태인 도축장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축장은 도축물량 대비 시설이 과잉상태로서, 도축물량 확보를 위한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악화로 위생시설을 관리할 여력이 없어 축산물의 위생상태 유지가 우려되고 있고, 앞으로 소비자들의 축산물안전성에 대한 관심증대와 FTA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축장 경영안정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판단에 따른 대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대책으로는 ▲도축장 통폐합시 지원하고 있는 현행 4%의 정책자금 금리를 통폐합설치기간(5년) 동안은 0%를 적용토록 하며, 일반업체의 도축가공장에 대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시설 자금지원시에도 1%p를 인하토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소비자단체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중하 등급 상위등급 위주로 지원하며, 상위도축장에 지원하는 무이자 운영자금지원 대상을 현행 1/3수준에서 향후 10년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구조조정을 촉진 ▲이와 함께 식육판매시 도축장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식육선택시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세법에 의해 소·돼지 도축시 납부하는 도축세는 시·군 등 자치단체의 일반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도축장의 위생수준 및 경영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군의 재정수입원으로서 도축장을 존치 유지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도축장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도축세를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축세폐지와 연계해 직접적인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가칭 ‘도축장구조조정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안정을 유지토록 하여 전반적으로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자신뢰 확보를 통해 수입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제1차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개최

제1차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지난 3월 22~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연구회에서는 한-중 FTA 추진에 대비하여 한·중 양국의 FTA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연구회의 추진 과제 및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대표단은 금번 회의에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향후 한-중 FTA 추진시에는 농업분야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림부는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연구 단계에서부터 농산물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FTA 협상 시작 이전에 양국의 정부, 업계, 학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등을 연구하는 모임으로서, 2차 회의는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분야 등 양측관심 연구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자 일제조사 실시

농림부는 2007년 상반기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자 일제조사를 오는 4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농어업인 세대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의 농어민 여부, 실제 농어촌 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농어촌(준농어촌 포함)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등 요건에 맞지 않는 세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는 약 48만7천 세대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3월 29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농림부, 시도, 시도 가축방역기관,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 등과 검역원 방역 관련 담당 부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1/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찰협의회에서는 최근의 질병 발생동향, 혈청 검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2006/2007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사항 및 역학조사 분석 자료, 소해면상뇌증(BSE) 예찰체계 개선에 따른 검사 강화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강문일 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추진에 있어 시도, 시군 등 지자체 방역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예찰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예찰협의회에 참석한 농림부, 시도, 시도 가축방역기관 관계관들은 지역별 방역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을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방역기관의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지침’ 수첩 제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시, 구제역 등 해외 가축질병



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중국, 태국 등 8개 외국어로 번역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지침’을 수첩형식으로 5,000부 제작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시군, 전국 공항만 등에 배포했다.

그동안 축산농가와 시군 방역담당 공무원이 축산농가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관리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방역수첩 제작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방역수첩에는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농가 종사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방역 준수사항으로 “농가 출입 시부터 외출 시까지 순차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앞으로 방역수첩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발생될 잠재적인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시도 방역 당국으로 하여금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농장주가 방역수첩에 담긴 내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자세한 내용은 ‘알아둡시다’ 92P 참조).

축산물등급판정소

3월 26일부터 닭고기 등급판정 실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최근 축산물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7년 3월 26일부터 닭고기 등급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돼지, 계란에 이어 닭고기도 품질등급을



표시하여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닭고기의 품질을 등급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닭고기의 품질등급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준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닭고기의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 신선도 등을 닭고기 생산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1, 2등급의 3개 등급으로 판정, 포장지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의무적으로 전 두수를 실시하는 소·돼지와는 달리 등급판정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닭고기 등급판정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 참여 희망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하림 등 8개 업체를 등급판정 시행업체로 우선 지정하여 실시하고, 4월 중으로 (주)동우 등 3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닭고기 등급판정사 직무교육 및 2007년도 닭고기 등급판정 시행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닭고기 등급판정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납부하게 되며, 1일 기본 7만원을 부과하고, 7천수 초과 시 마리당 8원, 1만수 초과 시 6원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2007년도 닭고기 등급판정 시행업체는 (주)하림, (주)체리부로, (주)올품, (주)신명, (주)마니커, (주)우림인티그래이션, (주)키토랑, (주)농협목우촌, (주)동우, 성화식품(주), (주)화인코리아 등이다(자세한 내용은 '특집' 46P 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은 지난 3월 30일 대회의실에서 개원 29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최정섭 원장은 기념사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 고객 만족을 통해 연구원의 미래를 열자”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이 청장년으로 성장한 것은 역대 원장님과 선배들, 직원들이 땀흘린 결과”라고 말하며, 연구원이 걸어온 29년을 회상했다.

최 원장은 “세계화와 시장개방 심화에 따른 어려움과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런 때일수록 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갖가지 사안별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최 원장은 “농업과 농촌의 연구를 이끌어 갈 인재를 확보·육성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 전문성을 갖고, 공감하는 연구를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는 연구원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 직원과 연구과제에 대한 포상도 있었다.

축산물HACCP기준원

식육판매업 HACCP 추가 지정 업소(3호) 지정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에서는 3번째 식육판매업 HACCP 적용업소를 지난 3월 20일자로 지정했다.

이는 축산물HACCP기준원으로 HACCP 지정 업소가 이관된 이후 처음이며 최초 지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근 최종 소비 판매 단계인 식육판매업계에서 HACCP 추진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지정을 받은 업체는 서울 오금동에 위치한 황우캐더링(대표자 김종례)으로 영업장 면적은 133.19㎡(판매장, 보관시설, 진열장 포함)이며 7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HACCP 지정을 받게 되었다.

현재 HACCP 지정이 활발한 배합사료 생산과 가축사육단계인 농장부터 최종 소비단계의 식육판매업소까지 HACCP 지정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축산식품의 'Feed(farm) to Table' 사전 안전 시스템을 구축,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축산물HACCP기준원은 식육판매업소의 HACCP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업 HACCP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정을 준비 중인 업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 재추대



신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에 현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장)이 만장일치로 재추대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동 소재 팔레스 호텔에서 대표자 회의를 갖고 신임 축단협 회장 선출 건 및 2007년 국제축산박람회 개최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임 축단협 회장에 현 남호경 회장이 한 차례 더 회장직을 맡아 남아있는 축산업계 현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남호경 회장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금 보다 더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부회장으로는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과 김동환 양돈협회장을 선임했으며, 감사에는 현 유동준 단미사료협회장과 조병대 종축개량협회장을 그대로 유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축단협 참여 의사를 밝힌 축산경제연구원(원장 노경상)을 새로운 회원단체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사)먹거리사랑시민연합

HPAI 발병원인 규명을 위한 학술포럼 개최

(사)먹거리사랑시민연합(상임대표 서유현)은 지난 3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12주년 기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병원인 규명을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